

북핵문제와 중국의 대응

신 상 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

요약

이 글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폐기하여 북핵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뿐만 아니라 북핵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경우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재개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전망하였다.

북핵 불능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6자회담 틀을 통해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가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6자회담의 수명이 다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6자회담의 제도화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6자회담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지역 다자안보기구로 확대 발전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파기하고 6자회담을 무력화시키면, 중국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려 할 것이다. 북핵문제를 미국 의도대로 해결하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유엔안보리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지지할 것이다.

I. 서언

북핵문제는 대만문제와 함께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제2차 북핵 위기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준비 중이었던 16차 당 대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발생하였으며, 장쩌민(江澤民)으로부터 권력을 계승한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 체제가 대처해야 할 첫 번째 외교안보 과제로 제기되었다.¹⁾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권적 차원에서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하였던 중국의 신지도부에게 북핵문제는 심각한 안보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신지도부가 표방하였던 ‘선린, 안린, 부린’(睦隣, 安隣, 富隣)정책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은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에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핵 확산 저지라는 국제규범을 침해하는 북한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였다.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그리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여, 중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과 핵무기 보유 주장 및 핵실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기 이전까지 북한의 핵문제가

1) 후진타오는 2003년 3월 중국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당 중앙 외사영도소조 조장직을 맡았다.

무력이나 압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핵 위기 발생 초기 미국 부시(George Bush)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법을 고려하였던 무력행사와 경제제재 방식을 채택할 경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은 3자회담과 6자회담이 성사되도록 중재역할을 발휘하여 북한과 미국간에 유지되었던 강경대치 국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북한과는 직접 양자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미국과의 양자대화만을 고집하였던 북한 사이의 강경 대치국면 속에서 중국은 ‘다자대화 속의 양자대화’라는 해법을 제시하여 6자회담을 통해 북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였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설득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중국의 체면이 크게 손상을 받게 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²⁾ 국제고립에 처한 북한에게 막대한 전략물자를 제공해 주고 미국의 대북 압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상정된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에 찬성하고, 선택적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발동하였다.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중국의 강력한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다.

2) 2007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 실무접촉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한 일이 별로 없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윤영관, “21세기 세계 정치와 한반도 평화,” http://kifs.org/new/Dbview.html?sec_sort=5&no=1937(검색일: 2007년 6월 11일); 朱鋒, “六方會談的制建設與東北亞多邊安全機制,” 『現代國際關係』, 2007年 第3期 (2007.3), p. 6.

그렇지만 북핵 실험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탕자쉬엔(唐家璿) 외교 담당 부총리를 평양에 파견하여 김정일에게 2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권고하였다. 결국 베이징에서 북·미·중 6자회담 대표간 회동이 이루어져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여전히 북·미간 대립을 중재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에 동결되었던 북한 불법자금의 미국 양보로 미국 연방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전액 북한 측에 송금됨으로써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조치, 즉 '2·13합의'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국 6자회담대표의 북한방문과 이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의 방북을 고려할 때, 북핵 불능화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폐기하여 북핵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뿐만 아니라 북핵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경우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재개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과 정책

북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라는 한, 중, 일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 동북3성 지역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고 중국과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외교적 지원과 협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보이느냐에 의해 북한의 태도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를 북핵 3원칙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와 요청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후에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북핵 위기관리와 북핵 해결 이후 전개될 한반도 정세변화 가능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목표는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 4대 경제대국, 3대 무역국 그리고 2대 군사비 지출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종합국력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역 강대국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중진국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는 대내 경제발전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의 신지도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동북진흥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1,300 킬로미터가 넘는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고, 일본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에게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작용함으로써 동북아와 한반도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9·11사건 이후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될 경우 중동지역의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할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북·미간 대립을 격화시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위험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일본에게 재무장의 구실을 제공해 줌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군사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기 어렵다.

국가발전 전략의 괴리와 지도부간 불신 등으로 인하여 중·북간 정치적 신뢰관계가 약화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일부 중국 전문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³⁾ 2007년 3월 김계관 부상이 미국 방문 시 밝힌 것처럼 북한이 미국의 대중 견제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 중국은 북한사회가 이완될 경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중국 내 테러리스트에게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⁵⁾

최근 미국이 동유럽지역까지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 보이면서 미·러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정책이 미국에게 동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근본적 목적이 중국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데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중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⁶⁾

이처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해 왔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이유가 외부의 안보위협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서는 안되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3) 중국사회과학원의 샤오핑 연구원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중·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邵峰, “朝核問題走向及中國的應對,” <http://www.iwep.org.cn/info/content.asp?infol=2666>(검색일: 2007년 5월 25일)

4) 중공 중앙당교의 장렌구이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나라는 중국이라고 주장한다. 張璉瑰, “擔心伊朗模式加身朝鮮的真實意圖,” 『中國評論』, 2006年9月號 (2006.9), p. 75.

5) Charles Wolf Jr., “The Multilateral Path to Disarming North Korea,” <http://www.rand.org/commentary/021605AWSJ.html>(검색일: 2005년 3월 28일)

6) 時殷弘, “美國國家導彈防禦計劃與中國的對策,” 『中國外交』, 2002年 第7期 (2002.7), pp. 47-51.

2.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중국은 북핵문제가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구도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북핵문제를 무력이나 압력수단만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고 북한에 대해 해상봉쇄와 군사적·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중국이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적 역할은 크게 제약받게 된다. 경제건설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을 배려해야 할 것인지 사이에서 중국은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다.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도 바람직하고,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⁷⁾

2002년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일본과의 동맹 강화 및 중앙아시아 진출 등을 통해 대중 견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부시 행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할 목적으로, 중국은 북한에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

7)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증대,” 『국가전략』, 제 11권 2호 (2005 여름), pp. 36-37.

8) 2000년 대만에서 독립지향적인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후 대만독립 움직임이 강화되었는데,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미국이 대만독립 저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랐다.

것을 주문하고 북·미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중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북한과 미국을 마주 앉도록 해야만 했고, 특히 북한을 6자회담에 참여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제적·외교적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⁹⁾

1990년대 중반 이래 중국은 ‘신안보’ 개념을 강조해 왔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신안보’ 개념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 신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6자회담은 이와 같은 중국의 북핵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한 구도로 활용되었다. 중국의 주도하에 마련되고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북핵 위기가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위기를 관리·완화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핵 위기가 평화적으로 다뤄지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9)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만을 고집하여 북핵위기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자 중국은 2003년 초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대북 송유관을 3일간 폐쇄하는 압력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경제적 지원카드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6자회담이 지속되도록 하여 국제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평화 애호국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 북핵 위기관리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북한에 대한·미국의 군사위협과 정권교체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북한의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¹⁰⁾ 미국의 패권 정치와 강권정치가 소련붕괴 이후 국제질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대북 위협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미국에게 대북 안보위협 해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이 중국 최고지도부의 체면을 무시하고 핵 실험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북핵 정책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합리적’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핵 3원칙으로 제기하지 않고,¹¹⁾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미간 대치 국면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이 전개되는 것을 막는 등 위기관리

10) 孫承, “第二次朝鮮核危機,” 『國際問題研究』, 2003年 第3期(2003), p. 19.

11) 북핵 실험 직후 중국외교부는 북핵 3원칙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 그리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협상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劉建超: 六方會談仍是解決朝核問題的有效途徑,” <http://world.people.com.cn/GB/8212/9491/57325/4901978.html>(검색일: 2006년 10월 10일)

에 역점을 두었다.¹²⁾

중국의 국익과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찬성하고 부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였지만, 중국은 징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게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고 고사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중국은 제재를 통해서도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대북 제재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탕자쉬엔을 미국과 북한 등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탕자쉬엔은 김정일에게 2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였으며, 미국에게는 무력과 제재수단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¹³⁾ 결국 중국의 중재외교로 2개월 만에 미국과 북한 6자회담 대표가 베이징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었다.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 참여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억류되었던 북한 자금문제가 해결됨으로써

12) 沈世順, “對朝鮮核試驗的看法,” <http://world.people.com.cn/GB/1030/4931822.html> (검색일: 2006년 10월 18일); 李敦球, “朝核試驗後的六方會談機制,” 『現代國際關係』, 2007年 第1期 (2007.1), p. 16; 林利民, “朝核危機管理與中國的外交抉擇,” 『現代國際關係』, 2006年 第8期 (2006.8), pp. 32-38.

13)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개최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류지엔차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며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劉建超: 六方會談仍是解決朝核問題的有效途徑.”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2·13합의'가 이행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방문이 성사되고 2003년 북한에서 철수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실무대표단이 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폐쇄를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측이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현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대북 에너지 지원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회담이 급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의거해 볼 때, 6자회담과는 별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 전 종전선언 협의를 제의한 바 있고, 남북한과 미, 중 4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13합의'에 따라 8월 중으로 6개국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될 전망으로 있고, 남북정상 회담과 4개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전협정과 관련된 국가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이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까지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가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해 타결된 후 북한은 곧바로 중국에게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을 철수하도록 요청하여 중국은 대표단을 '소환'하였다. 북한은 미국과만 정전체제 전환문제를 논의할 수 입장을 보인 것이다. 2005년에도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 남북한과 미국간 3자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더욱이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북간 이견

이 계속 심화되고 중국의 역할이 축소될수록 북한은 중국을 또 다시 배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의 당사자가 남북한과 미, 중 4개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⁴⁾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유지에 유리하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발발하게 된 근본적 이유도 냉전적 대립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만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⁵⁾

다만, 중국은 남북한과 미, 중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급진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의 중요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북·미 및 북·일관계의 급격한 진전 등이 가져오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Ⅲ. 북핵문제의 부분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대응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미국 등 5개국이 대북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북한과 양자

14)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 전략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의 발언, 2007년 4월 21일.

15) 王林昌, “六方會談只說停戰還不夠,” 『環球時報』, 2006年 11月 27日.

회담을 개시하며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개최하는 대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핵시설의 불능화에 응하는 것을 북핵문제의 부분적 해결로 규정하기로 한다. '2·13합의'에는 북한이 이미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 폐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부분적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비록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중국이 주도하는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¹⁶⁾ 중국은 북한의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까지 규정한 부분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13합의'로 북한의 핵실험 실시 직후 조성되었던 대북 제재 분위기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어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주변정세의 안정과 평화유지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초래할 위협성을 고려, 중국은 북핵문제가 대화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계속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추진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정책과 미·일 동맹관계 강화에 대해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16) '9.19 공동성명' 채택과정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남북자문제를 북핵 6자회담에서 거론하지 말고 북·일 양자간에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1차 북핵 위기 시에 보여 주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한 국제적 보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한·미·일과 유럽연합이 북한에 2기의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해 주고 중유를 공급해 주는데 참여하였으나, 중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대북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북한에 직접 경제원조를 제공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도출되었기 때문에, 중국도 대북 중유제공 분담방안을 흔쾌히 수용하였다. 자신이 북핵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고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대북 경제원조를 단독으로 제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6자회담 참여국과 함께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을 선도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단독 지원보다는 집단적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국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¹⁷⁾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려 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진전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와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협력 및 동북아

17) 북한을 부담으로 보는 중국인들의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상진, “중국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흑인가 방파제인가,” 김동길 외, 『북한자유선언』(서울: 르네상스, 2007), pp. 136-150 을 참조.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활발하게 개최될 것인데, 중국은 5개의 실무그룹이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6자회담 구도 속에서 상호연계 하에 추진되기를 바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의 장국을 맡고 다른 실무그룹은 다른 국가들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구도 속에서 중국은 힘든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은 다른 나라들이 향유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논의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이며, 이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후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동북아질서를 새롭게 모색해 나가기 위한 게임에서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¹⁸⁾ 그리고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북한자금 송금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중국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데 반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지지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중·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북핵 불능화 논의 및 북핵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직면하여 중국은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힐 미국 6자회담 대표 방북 직후인 2007년 7월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지도부와 접촉을 가진 것도 북한을 포용하려는 목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효용성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18) 時永明, “朝鮮突破核邊緣之後,” 『中國評論』, 2006年 11月號 (2006. 11), p. 16.

위해 6자회담 5개 실무그룹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불능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6자회담을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지역 다자안보협력체로 격상시키려 할 것이다.¹⁹⁾

요컨대, 북핵 불능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6자회담 틀을 통해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가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 시 중국의 대응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과 북한의 경제적 낙후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포기과 개발된 핵무기 폐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²⁰⁾ 북한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와 같은 근본적 걸림돌이 제거 될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

19)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주평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6자회담이 추구하는 3대 임무라고 주장한다. 朱鋒, “六方會談的制度建設與東北亞多邊安全機制,” pp. 1-3.

20) 薛力, “中國應對朝鮮問題的綜合戰略框架,” 『中國評論』, 2007年 1月號 (2007. 1), pp. 47-48;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위사오화 연구원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虞少華, “朝核問題轉圜與六方會談前景,” 『國際問題研究』, 2007年 第3期 (2007.3), p. 55.

는데, 이들 문제점들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이 해소되어 체제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생존차원에서 추진해 온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북한계좌 송금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²¹⁾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미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전면 폐기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공고한 보장을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경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내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 환경조성을 주변국 외교의 핵심기조로 삼고 있는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이에 따른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일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정책을 포기하게 되면 ‘북한 위협론’을 구실로 자위대 병력 강화를 모색해 온 일본을 상대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중국은 판단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 간 군사안보 협력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여 역내에서

21)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평양을 방문한 뒤 6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 [http://mofat.korea.kr/mofat/jsp/mofat1_branch.jsp?_action=news_view&property=a1_sec_1&_id=155215955&currPage=1&_category=\(검색일: 2007.6.30\)](http://mofat.korea.kr/mofat/jsp/mofat1_branch.jsp?_action=news_view&property=a1_sec_1&_id=155215955&currPage=1&_category=(검색일: 2007.6.30))

외교 안보적으로 중국의 운신의 폭을 확대시킬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가 없는 북한은 안보 및 경제적으로 배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경우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이다.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미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을 통한 안보를 냉전시기의 잔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본다면, 중국은 한·미동맹과 중·북동맹을 일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스스로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러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중국은 원칙적으로 지지할 것이나, 과도하게 빠른 관계정상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신장됨에 따라 미국이 중국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대북 관계정상화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7년 1월 북·미 베를린 회담과 3월 뉴욕 실무접촉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북·미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북·중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시도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의 안보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더라도 중국의 세력권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고립 타개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도 북·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북핵 해결 이후 북·일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정상화되어야만 한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2002년 9월 북·일 평양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와 같이, 중국은 일본의 대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여 북·일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중·일이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역내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경쟁을 지속하는 한, 중국은 북·일간의 관계정상화 의도에 의혹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김정일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보다는 경제발전을 통해 체제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스스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왔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대북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고 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묶어두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²²⁾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과 중국 사이에 동북지역의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주한 미군이 중·북 접경지역까지 진출하여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반도가 조기에 통일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측면이

22) 薛力, “中國應對朝鮮問題的綜合戰略框架,” p. 51.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되면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고, 중·북간에 체결된 영토협정으로 중국과 통일한국 간에 영토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통일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경쟁국인 미·일의 한반도 진출을 견제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6자회담의 수명이 다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6자회담의 제도화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6자회담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지역 다자안보기구로 확대 발전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확대시킴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동맹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고 역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²³⁾

V. 북핵문제 해결 실패 시 중국의 대응

부시 미 행정부는 집권말기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완전히 빠져 나가고 이란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화를 통한 북

23) Yong Deng, "China and the Six-Party Talks: Strategic Interests behind Crisis Management,"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3 (Fall 2006), p. 376.

핵문제 해법을 강구할 전망이다. 그리고 북한도 핵실험 실시이후 막다른 골목에서 맞이한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여곡절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완전히 해소할지 의문이며 인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할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온 핵무기를 북한이 폐기할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동문제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행정부가 새로 들어설 경우, 미국은 북핵문제를 무력이나 경제적 압박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추구하게 될 경우 북한은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핵 폐기 입장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화방식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지면 북핵 6자회담 노력도 실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것이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 노력이 증대되는 등 동북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목전에 다가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중국 동북지역에 외자를 유치하여 낙후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²⁴⁾

24) 2007년 3월 중국 전국인대 회의에서 천태신 단둥시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단둥의 경제건설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공표하였다. “北 핵실험으로 단둥시 외자유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파기하고 국제사회의 대 북한 핵 협상이 실패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중국은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중점을 두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외교노력과 함께 선택적 압력 수단을 가할 것이다. 이미 핵 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2·13합의'를 파기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대응과 파급영향이 강력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을 과거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될 경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에는 반대할 것이나 대북 경제적 압력수단을 가하는 데에는 찬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화를 통한 북핵 위기 해소가 불가능해질 경우, 중·북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압력수단만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위기국면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화국면이 재개되도록 외교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될 경우, 중국은 특히 한·미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과 국제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일의 대북 압박 수위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며, 중·미 전략대화의 핵심 의제의 하나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주재 대사관에서 공사를 역임한 바 있는 류샤오밍(劉曉明)을 주북한 대사에 임명하고 북한문제를 다룬 경험이 없었던 천나이칭(陳乃淸)을 북핵 담

치 차질,”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7/03/07/0603000000AKR20070307114500074.HTML>(검색일: 2007년 3월 7일)

당대사에 임명한 것도 북핵문제를 중·미관계의 맥락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노력이 실패하면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재상정되고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주도하에 대북 제재 조치가 발동될 것이다. 중·북 동맹조약에 의하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군사위협과 행동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해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외교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핵 폐기 약속을 파기하고 6자회담을 무력화시키면, 중국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려 할 것이다.²⁵⁾ 아울러 중국은 미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 병력에 의한 북한공격에는 반대할 것으로 보이며, 유엔 안보리에 의한 북핵 위기 해결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이래 중국이 '신안보' 개념을 제기하면서 국제분쟁 해결과정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무장 의도를 분명히 하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유엔 안보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 위기가 다시 악화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동북아에 대한·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심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핵문제를 미국의 의도대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유엔안보리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지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다음날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북관계가 맹방관계에 있지 않고 일반적 국가간의 관계라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劉建超: 六方會談仍是解決朝核問題的有效途徑.”

VI. 결론 및 함의

북핵문제의 부분적 해결,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그리고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 실패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기반하여 행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13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되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에너지 등 경제보상을 제공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소해 주고,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궁극적으로 개발된 핵무기까지 파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6자회담이 중국의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게 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면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미국의 주도권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북·미 및 북·일 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자신의 안보이익에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6자회담을 제도화하여 북핵문제 이후에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확대하려 할 것이며,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문제를

다루는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로 확대발전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문제가 ‘2·13합의’ 대로 잘 해결되든 대화를 통한 해결에 실패 하든 중·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 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많다.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북·미 및 북·일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중·미와 중·일이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미 및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중·북간의 결속력은 이완될 소지가 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파기하여 북핵문제 해결노력이 실패할 경우에도 ‘평화발전과’ ‘조화세계’ 구축을 대외전략 기조로 삼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중·북간 동맹관계의 실질적 의미는 점차 퇴색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동맹관계의 맥락에서 다루기보다는 지역안보와 세계전략 차원에서 다뤄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재관,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 봄).
- 백학순, “6자회담 ‘2·13 합의’: 내용, 쟁점, 전망,” 『정세와 정책』, 2007년 3월호 (2007. 3).
-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증대,”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여름).
- 윤영관, “21세기 세계정치와 한반도평화,”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5&no=1937(검색일: 2007년 6월 11일).
- 황병무, “중국의 한반도 군사 시나리오,” 『국방일보』, 2007년 4월 5일.
- 時殷弘, “中 북한 감싸기는 끝났다,” 『동아일보』, 2007년 5월 12일.
- 時殷弘, “中美戰略對話的重要意義和可能前景,” 『中國評論』, 2006년 2월號 (2006.2).
- 時永明, “朝鮮突破核邊緣之後,” 『中國評論』, 2006년 11월號 (2006.11).
- 朱鋒, “六方會談的制度建設與東北亞多邊安全機制,” 『現代國際關係』, 2007년 第3期 (2007.3).
- 王林昌, “六方會談只說停戰還不,” 『環球時報』, 2006년 11월 27일.
- 林利民, “朝核危機管理與中國的外交抉擇,” 『現代國際關係』, 2006년 第8期 (2006.8).
- 林利民, “六方會談是推遲 牌的機制, 而不是解決問題的機制,” 『中國評論』, 2006년 9월號 (2006.9).
- 孫承, “第二次朝鮮核危機,” 『國際問題研究』, 2003년 第3期 (2003.6).
- 華陽子, “美國對朝政策調整與朝美核爭端,” 『中國評論』, 2006년 10월號 (2006.10).
- 李敦球, “朝核試驗後的六方會談機制,” 『現代國際關係』, 2007년 第1期 (2007.1).
- 邵峰, “朝核問題走向及中國的應對,” <http://www.iwep.org.cn/info/content.asp?infol=2666>(검색일: 2007년 5월 25일).
- 張璉, “擔心伊朗模式加身朝鮮的真實意圖,” 『中國評論』, 2006년 9월號 (2006.9).

虞少華, “朝核問題轉 與六方會談前景,” 『國際問題研究』, 2007年 第3期 (2007.3).

沈世順, “朝鮮被凍結資金問題的解決給我們的八個啓示,” <http://world.people.com.cn/GB/14549/5911283.html>(검색일: 2007년 6월 26일).

崔立如, “朝鮮半島安全問題: 中國的作用,” 『現代國際關係』, 2006年 第9期 (2006.9).

“秦剛就六方會談, 中歐關係, 歐盟對華軍 等答問,” <http://world.people.com.cn/GB/8212/9491/77793/5916076.html>(검색일: 2007년 6월 27일).

Deng, Yong, “China and the Six-Party Talks: Strategic Interests behind Crisis Management,” *Korea and World Affairs*, Vol. XXX, No. 3 (Fall 2006).

Kim, Samuel S, “China’s Conflict-Management Approach to the Nuclear Standoff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Perspective*, Vol. 30, No. 1 (2006).

Wolf Jr., Charles, “The Multilateral Path to Disarming North Korea,” <http://www.rand.org/commentary/021605AWSJ.html>(검색일: 2005년 3월 28일).